

입법정책정보

-제10호-



대전광역시의회

○ 입법정책정보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사항과 최신 외국정보 등을 법제처 국가정보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대전광역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됩니다.

|| 목 차 ||

I. 상위법령 제·개정	1
1. 공동주택관리법	1
2. 도로교통법	7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11
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5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23
1.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23
2.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5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27
IV. 최신 외국 입법정보	32

I 상위법령 제 ·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64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략)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또는 녹화·녹음 등의 방식으로 중계하거나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⑨ ~ ⑫ (생략)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 ⑤ (생략)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방법·절차 및 제7항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5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독 또는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6조의2(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3. 그 밖에 지역 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센터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 2023. 4. 21.] [대전광역시조례 제6031호, 2023. 4. 21., 일부개정]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8., 2019.12.27.>

1. 주택단지 내 도로, 보도, 하수도 등 부대시설의 보수
2.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작은 도서관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보수
3. 자전거보관대·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4.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5.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의 보수

② 시장은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4.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사 요청서
2. 각 세대를 대표하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4.20.>

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어린이집 임대료에 관한 분쟁이나 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정한 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정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분쟁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경우

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감사반의 편성·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합동감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자문,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합동감사반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반원이나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감사반·합동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할 사항, 감사기간 등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장의 협조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시설·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감사장의 설치와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담당 공무원의 배치와 업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에 대한 사실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감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3.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4.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5.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조례」

[시행 2017. 5. 11.] [대전광역시조례 제4864호, 2017. 2. 10., 제정]

제4조(층간소음방지계획)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층간소음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층간소음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층간소음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층간소음 관련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 실시
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정 · 개정 이유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정의) 1. ~ 33. (생략)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략)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 · 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 · 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시행 2022. 10. 14.] [대전광역시조례 제5910호, 2022.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의2(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통학안전에 관한 교통안전지도
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의2(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827호, 2023. 10. 18., 일부개정]

□ 제정·개정 이유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9385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수집·이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접한 주택단지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많은 지역 등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 2. (생 략)

3. 소규모재건축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로서 하나의 주택단지 또는 둘 이상이 연접(주택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가 폐지되거나 노선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주택단지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다.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이용을 위한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간(廢空間) 현황자료

제38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가 해당 지역의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라.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등이 해당 지역의 재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일 것
3. (생략)

제41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생략)

② 토지주택공사등은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 12.] [대전광역시조례 제5883호, 2022. 8. 12., 일부개정]

제3조(소규모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으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 구역
-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정한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 ④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감(減)한다.
- ⑤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은 100분의 30을 증가한 지역으로 한다.
- 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는 100분의 25를 감(減)한다.
- ⑦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가로구역의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로 한다.

제9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2(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예정구역 지정 등) ① 영 제15조의4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2.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3.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 ② 영 제15조의4제5항제5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예정구역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예정구역 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을 위한 변경
3.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100분의 10 이하로 증감(增減)하는 변경

③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예정구역의 위치도와 현황사진
2. 사업시행예정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23조의2(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 영 제38조의2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구역·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2.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업지역 정비구역

제23조의4(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의 내용)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40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통합 시행계획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방법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계량에 관한 계획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5.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주택건설계획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

□ 제정·개정이유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같은 편 제2장 외환의 죄
2.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3.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
4.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제2항의 죄
5.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다만,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의 경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한정한다.
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15조의2의 죄는 제외한다.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죄. 다만, 같은 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10.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의 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

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유족을 포함한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피의자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한 때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한다.

⑨ 신상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는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④ 법원은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피고인, 그 밖의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은 검사가 집행하고, 이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제5항·제8항·제9항을 준용한다.

제6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①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피고인에 대한 보상) ①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신상정보 공개,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수개의 특정중대범죄로 인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의 일부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을 할 때에는 1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이 경우 신상공개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9조(비밀누설죄)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 1.] [법률 제19741호, 2023. 10. 24., 일부개정]

□ 제정 · 개정이유

○ 학교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신설하며, 국가가 학생 치유 ·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법률지원을 포함한 통합지원 전담부서 및 전문기관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하며, 피해학생 및 신고 ·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인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가해학생이 교육장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고, 집행정지 결정 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의 민 ·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함.

<법제처 제공>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 유인, 명예훼손 · 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생 략)

-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5. (생 략)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① 국가는 학생 치유 · 회복을 위한 보호시설 운영, 연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센터(이하 “학교폭력 예방센터”라 한다)를 지정 ·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설치 · 운영과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① 학교의 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른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교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생생활지도가 관계 법령 및 학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학교폭력사건 처리 또는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①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촬영물등의 대상자가 되어 입은 피해를 말한다)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삭제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방법, 제4항에 따른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4(집행정지) ①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원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30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 사실 및 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그 사실 및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의 절차, 방법,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우리 시 관련 조례)

「대전광역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조례」

[시행 2015. 2. 17.] [대전광역시조례 제4412호, 2015. 2. 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학교폭력 예방 사업)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 조사

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상담·치료 등 지원
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선도 등 지원
4. 학교폭력 예방 홍보·교육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둔다.

제6조(자문)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상담, 치료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II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부산광역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1.] [부산광역시조례 제7069호, 2023. 10. 11., 제정]

□ 제정이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대책,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및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3.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예방·지원사업) 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안전·추적장치 등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자치구군, 경찰청, 교육청,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512호, 2023. 10. 12., 제정]

□ 제정이유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하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환경 보호 및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견 제출, 자문, 플로깅 시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III 자치법규 참고정보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1.

[안건번호: 의견23-0267 /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의뢰안전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주요내용

[질의요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는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이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에서는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 요원(이하 “민방위대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교육 및 훈련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전지(轉地)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지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주차비 등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각주: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각주: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살피건대, 「민방위기본법」 제3조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서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무는 민방위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므로 해당 사무는 은평구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하여 기부·보조, 그 밖의公款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1항에서는 전지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대요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사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규정만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 참조).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

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따라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것인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은평구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소개 2.

[안건번호: 의견23-0223 /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산시]

□ 의뢰안건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관련)

□ 주요내용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이 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제1호),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제2호),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제3호),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제4호), 그 밖에 이 영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위원의 구성(제1호), 위원의 자격(제2호), 위원장 선임방법(제3호), 민간위원의 임기(제4호)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1조에서는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산시의회에 두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5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4항), 이 사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즉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특정 사항을 심의하는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그 자문기관의 명칭·구성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을 해당 자문기관에서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0. 9. 3. 의견제시 20-0214; 법제처 2017. 9. 6. 의견제시 17-0205; 법제처 2017. 4. 6. 의견제시 17-0080; 법제처 2010. 2. 1. 회신 09-0395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이고, 행동강령자문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문기관으로, 각각의 위원회는 명칭·심의사항·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 따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3항에서는 조례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한 자문기관인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Ⅳ 최신 외국 입법정보

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 규정

□ 주요내용

기술 수준의 향상과 국제교류의 증대로 핵심기술의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기업 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다양한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있다. 특히 제18조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외 유출의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처벌 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독일

독일은 「영업비밀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또는 기업의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해외에서 사용하는 자 또는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할 때 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자에게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러시아

러시아는 「형법」 제183조에 따라 상업적(영업)비밀 또는 조세, 은행 부문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위탁받은 자 또는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자가 정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백만 루블(한화 약 1,4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간의 특정 직책 수행 및 활동 참여 기회의 박탈을 동반한 최대 2년 치 임금 및 소득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2년의 교화노동 또는 최대 4년의 강제노역 또는 동기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미국

미국은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그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를 「형법」 제90장(제1831조-1839조)에 따라 금지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자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일반적 처벌 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한화 약 3억 4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며, 외국 정부나 기관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지며 위반자가 단체일 경우에도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베트남

베트남은 영업비밀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으나 「노동법전」 제125조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징계하고 처분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쟁 분야의 행위 위반 처벌에 관한 의정」 제16조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의 보안조치를 해제하여 정보를 접근·수집하거나 보유자의 동의 없이 그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하는 경우 2억동(한화 약 1,098만원) 이상 3억동(한화 약 1,647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국

영국은 판례법으로 영업비밀이 보호되고 있으며, 영업비밀이 문서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하는 행위를 절도행위로 간주, 절도죄를 적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EU에서 “비공개 노하우 및 영업정보의 불법 획득, 사용 및 공개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 위원회 지침”이 제정되고 이의 시행을 위한 국내법 「2018 영업비밀 규정」을 제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판례법을 통해 영업비밀이 보호되고 있고, 다양한 법률 규정(형법, 계약법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이미 충분하지만 영업비밀의 정의나 소송절차 세부사항(관할, 기한 등)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한 것으로, 동 규정은 2018년 6월 9일부터 시행되었다.

오만

오만 「1990년 제55호 상법」 제50조에 따르면,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속한 근로자나 직원을 대상으로, 그 상인의 고객을 유인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경쟁상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알려주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는 배상책임이 있는 불공정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인도

인도는 다른 영미법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업비밀 보호만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법원이 개별적 상황에 대하여 「계약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법」 등 각 분야에 해당하는 법률을 적용하거나, 형평의 원칙 및 신뢰훼손에 대한 보통법상 해결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법」 제72조에 따른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또는 십만 루피(한화 약 16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2000년 제30호」에 따라 의도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

밀을 유출하거나, 권리 없이 의도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위반을 저지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또는 3억 루피아(한화 약 2,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이 적용된다.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한 자(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엔(한화 약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된다. 또한, 일본 국외에서 상기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엔(한화 약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국내에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5억엔(한화 약 50억원) 이하, 국외에서 상기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억엔(한화 약 10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본 국내외, 자연인 및 법인 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행위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다.

중국

중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1조에 따라 위법행위 중지명령을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최대 500만 위안(한화 약 9억 18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구성시 「형법」 제219조에 따라 벌금과 최대 10년의 유기징역을 병과할 수 있고, 국외유출 목적이 있는 경우 벌금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병과할 수 있다.

태국

태국은 「2002년 영업비밀법」에 따라 영업비밀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밧(한화 약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 중 취득하거나 사전 인지한 영업비밀 관리자의 업무 관련 사실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밧(한화 약 3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형법」 제226-13조에서 자신의 지위, 직업이나 직무 또는 일시적 임무를 통해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징역 1년 및 벌금 15,000 유로(한화 약 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사기업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https://world.moleg.go.kr/web/dta/lgsITrendListPage.do>), “세계 각국의 영업비밀침해 처벌 규정”, 공공누리 제1유형, 2023.10.18.